

「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」 토론회  
세션 2 발표자료

## 추가세수의 전략적 자산화와 미래대응기금 설계: 성장투자·안정화·채무관리의 지속가능한 조합

이태석

한국개발연구원 재정·사회정책연구부장

2026. 9. 11. | 엘타워 스포타임 멜론홀



※ 본 발표자료의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견해이며, 소속 기관 및 토론회 주최 기관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.

# 발표요지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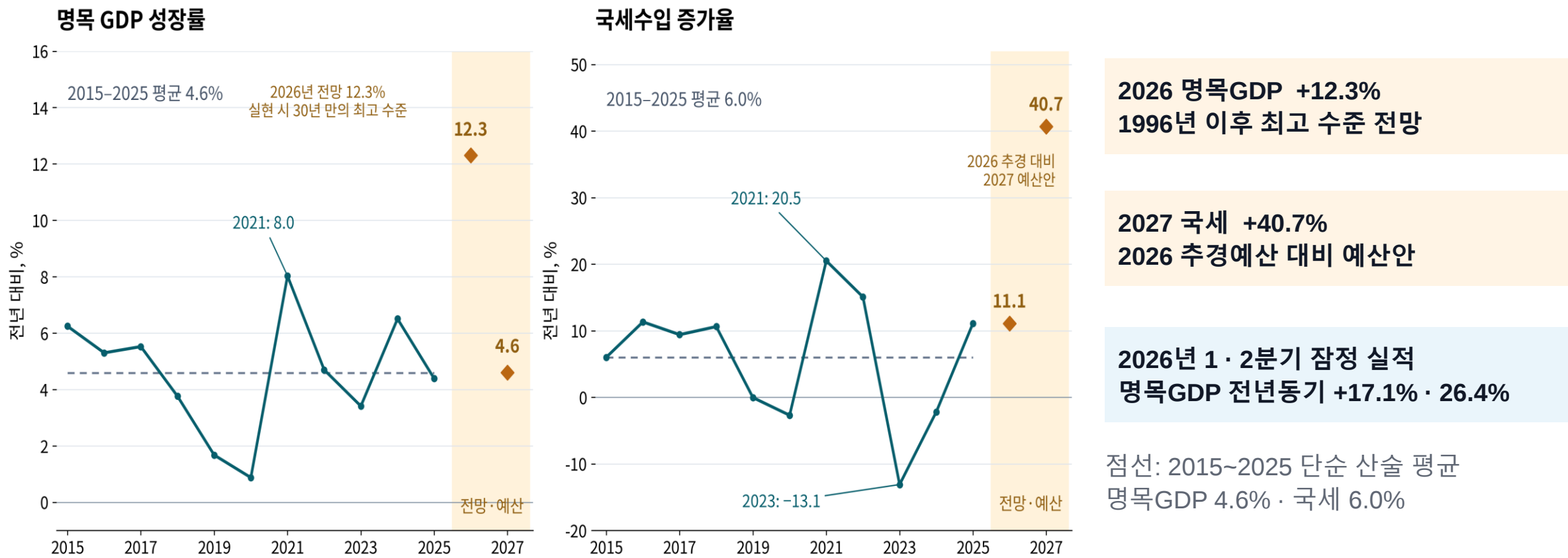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거시경제 · 재정여건 | 30년 만의 명목성장을 최고치 전망과 특정 세목에 집중된 대규모 세입 확대  |
| 정부안         | 총괄계정과 4대 정책계정으로 162.3조원 운용 계획              |
| 기대효과        | 호황기 적립 → 충격 완충 → 성장투자 연속성·미래자산             |
| 개선방향        | 재원 검증(재원마련) · 운용규칙 분리(채무 포함, 기금운용) · 국회 통제 |

# 발표개요

---

-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01 기금설치 배경  | 세입 호황의 이례성 · 현행 재정제도의 한계 ·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개념구분 |
| 02 기금구조 정부안 | 162.3조원 재원 흐름 · 총괄계정과 4대 정책계정              |
| 03 기대효과     | 예산·기금의 비교 · 아일랜드 사례 · 성공적 산업정책의 조건         |
| 04 개선방향     | 입금·정산 → 유동성·채무 → 투자규율 → 국회 등 재정통제 주체 간 합의  |

# 30년 만의 명목성장률 최고치 전망과 대규모 세입 확대 기회



큰 기회이나 결산은 미확정 | 과거에도 2021·2022년 국세수입 증가율 급등 경험은 존재

주: 실선은 실적, 마름모는 전망 및 추경예산, 음영은 전망 예산 연도를 의미함.  
출처: 한국은행 ECOS·국세결산; 재정경제부 경제전망(2026.7.14)·2027 세입추계

## 현행 재정조정 기제를 보완할 사전 배분 규칙이 필요

### 기존 재정조정 기제

- 9월 재추계·국회 보고
- 세입보전 국채 상환
- 추가경정예산·교부금 정산제도·세계잉여금

### 남아 있는 제도적 과제

- 구조적 증가와 일시 호황의 구분
- 호황기 적립·투자·채무의 사전 순서
- 지방·교육의 세수 변동성과 수요 불일치

기금 설치는 분산된 처리 통로를 객관적·대칭적 규칙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음.

## 추가세수와 초과·부족세수는 다른 개념임에 유의

| 기준             | 산식      | 의미·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부안 추가세수       | $B - T$ | 정부가 예산을 짤 때 평소 흐름보다 더 걷히는 부분 (예산이 추세를 웃돈 전망치) |
| 정부안 예상 초과세수    | $D - B$ | 9월 재추계가 당초예산을 웃돈 전망치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결산상 초과·부족세수    | $R - B$ | 세입예산의 사후 추계차이 확정 → 원인·정확도 평가                  |
| 출연 자원 관련 정책 제안 | $R - T$ | 결산이 사전 추세를 웃돈 금액 중 일시분                        |

B=당초예산 D=9월 재추계 R=결산 T=추세(정부안: 2025년 결산 내국세  $\times (1.062)^2$  / 정책제안: 사전공표·정책 중립)

$$R - T = (B - T) + (R - B) \mid \text{예산 대비 오차만으로 자동 출연하지 않는 방안 검토 필요}$$

출처: 정부 기금설명자료; 세수오차 분석과 T와 확정출연 규칙은 정책 제안 내용임.

# 정부안: 162.3조원의 용도별 구분

## 미래대응기금 162.3

| 구분      | 규모    | 정부안의 주요 기능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총괄계정    | 109.4 | 국채발행 축소 12.5 + 총괄 여유재원 96.9 |
| 4대 정책계정 | 52.9  | 사업 45.4 + 지방·교육 여유재원 7.5    |

재정 연계      세입확대 → 기금전입 → 계정별 운용·공공자금관리기금(공자기금) 연계  
국채 신규발행 12.5조원 축소 계획은 별도로 평가

## 기금규모 ≠ 신규지출 ≠ 즉시 쓸 수 있는 현금 ≠ 국가채무 상환액

## 4대 정책계정: 사업 45.4조원과 여유 7.5조원

| 계정    | 합계   | 사업   | 여유  | 대표적 지출 방향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청년    | 13.3 | 13.3 | —   | 일자리·창업·주거·자산형성 |
| 성장동력  | 14.2 | 14.2 | —   | AI·신산업·산업 전환   |
| 지방    | 15.3 | 10.3 | 5.0 | 지역성장·연결·통합지원   |
| 교육·인재 | 10.1 | 7.6  | 2.5 | 과학기술·고등교육·인재   |

정책 분야와 지원수단이 혼재하여, 사업별로 추가성·지속재원·성과를 개별 평가할 필요

# 예산과 기금: 같은 재정, 다른 관리 강점

| 비교    | 예산: 일반·특별회계       | 기금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강점    | 통합 우선순위·연례 사전통제   | 특정목적 적립·자산·위험 관리    |
| 한계    | 단년도 편성·연말 집행 압력   | 재정 분절·유휴자금·변경재량     |
| 적합 용도 | 상시 서비스·반복급부·일반 투자 | 일시세수 완충·금융자산·조건부 약정 |
| 공통 규율 | 국회 심의·결산·총지출 관리   | 국회 운용계획·결산·통합 재정통계  |

기금의 편익은 지출 확대가 아니라 필요한 때까지 재원을 보존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음.

기대효과는 합리적인 설계조건을 충족할 때 실현됨.

| 기대효과     | 실현 경로               | 필수적 설계 조건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미래세대 자산  | 일시세수의 소비·영구급부 고착 방지 | 실제 가용잉여·출연상한 |
| 성장투자 연속성 | 불황기 유망사업 중단비용 완화    | 선별·단계약정·운영재원 |
| 충격 완충    | 세수·재난 충격 때 한시적 유동성  | 인출조건·한도·재적립  |
| 채무 회복력   | 발행·이자·만기 위험의 완화     | 자산·부채 통합관리   |

장점과 함께 예산 분절·차입저축·사업 포획·지방 위험전가 통제 필요

## 아일랜드: 장기저축·충격완충·국내투자 분리

| 구분     | FIF (Future Ireland Fund) | ICNF (Infrastructure, Climate & Nature Fund) | ISIF (Ireland Strategic Investment Fund)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목적     | 2041년 이후 지출               | 가까운 충격 대응·환경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내 경제·고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본 납입  | 2024~2035년 GDP 0.8%       | 2024년 초기 이전 €2bn + 2025~2030년 연 €2bn         | 별도 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용 성격  | 장기 분산투자                   | 유동성·저위험 중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업적 수익·국내 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국 시사점 | 장기자산 보존                   | 인출 요건·기간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책사업 평가 분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한국 정책에의 시사점: 출연비율보다 목적·만기·자산위험의 분리 | 차입하며 저축하는 구조는 경계

# 산업정책: 선별지원과 경쟁·학습·퇴출을 결합

---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능성         | 지식·조정 의 시장실패를 줄이고 민간투자·기술확산을 촉진  |
| 실무적 한계      | 기업선택 오류·정치적 포획·민간대체·인력·전력·인허가 병목 |
| 공통 기반 우선 마련 | 기초연구·인재·경쟁·개방·인프라 등 보완적 구조개혁     |
| 지원 절차       | 공개경쟁 → 공동부담 → 단계평가 → 확대·중단·환수    |

## 기금편성액은 잠정한도, 기금 전입·적립액은 결산·정산으로 확정

- ① 계획 추세 산식·범위·자료 기준을 사전공표; B-T는 잠정한도
- ② 재추계 D-B 원인과 상하방 범위를 공개; 자동귀속은 배제
- ③ 결산 검증 R-T를 세법·일회성·징수시점 조정 후 독립검증
- ④ 대칭 정산 확정액과 잠정액의 차이를 추가출연·환입으로 정산

B=당초예산 D=9월 재추계 R=결산 T=추세 (정의는 슬라이드 6 참고)

확정 출연  $\leq$  일시적 R-T와 실제 가용잉여 중 작은 금액

차입출연 금지 | 결산 전 불가역적 약정 제한

# 유동성·성장자산·채무를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

| 관리 대상 | 핵심 기준              | 운영 규칙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유동성   | 세수·정산·만기·비상지출 스트레스 | 하한·상한, 인출조건, 자동 재적립 |
| 성장자산  | 사업기간·운영비·회수가능성     | 단계약정, 계정별 손실한도      |
| 채무    | 이자·만기집중·총조달수요      | 시장발행 대체와 실제 비용절감 확인 |
| 통합 점검 | 현금·약정·금융자산·우발채무    | 분기 스트레스·국회 통합보고     |

여유재원은 계획상 잔액으로, 즉시 인출 가능한 안전자산인지 별도로 확인 필요

## 4대 계정은 분야명이 아니라 사업의 추가성으로 평가(사중손실 제외)

| 계정    | 우선 투자 영역           | 성과 기준, 보완 대체 정책수단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청년    | 역량·취업·이동성·돌봄 제약 해소 | 고용·임금·창업생존 기여, 반복급부는 예산에서 지원  |
| 성장동력  | 기초기술·확산·공통 인프라     | 민간 추가성·경쟁·집중 한도 충족, 구제금융과는 분리 |
| 지방    | 광역 연결·공공재·수요 확인 사업 | 생애비용·운영재원·국가 전체 추가성           |
| 교육·인재 | 학습·연구확산·숙련 형성      | 학습·취업성과 평가, 상시 인건비 재원은 별도 확인  |

단계적 지급·중단·일몰·성과공시를 공통 적용하고, 사업별 실패에서 학습하도록 설계

# 지방·교육은 자원과 위험을 함께 합의

| 쟁점    | 개편의 잠재 편익       | 합의할 보호장치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세수 주기 | 일시 증가의 자동이전 평탄화 | 상·하방 대칭정산·예측오차 범위  |
| 교육 수요 | 명목GDP·학령인구 반영   | 소규모학교·특수교육·고정비 보정  |
| 지방 자율 | 성장·위기대응 자원과 구분  | 일반재원 최소선·전환기간      |
| 재정 귀착 | 중앙·지방 자원분담 재설계  | 교부금·기금·기타이전 통합 영향표 |

정부가 제시한 현행 산식 대비 교부금 감액 추정 63.0조원 ≠ 지방·교육의 최종 순감액

## 신속한 금융운용과 신규 정책지출을 구분하여 관리

### 정부안의 신속성

- 주요항목 30% 이하 변경 특례
- 세입부족 보전 전출 특례
- 직접·외부 전문운용 가능

### 통제 내실화 정책 제안

- 금융운용은 사전 위험한도 내 재량
- 신규사업·계정 이전은 국회 사전심의
- 비율·절대액 이중한도와 독립감사

현금·다년도 약정·금융자산의 세 장부를 국채·우발채무와 연결해 공개

## 배분 순서는 고정비율이 아니라 재정 상태에 연동하여 신축적으로 조정

---

-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선행 정산·기존채무 점검 | 교부금 정산·기발행 세입보전 국채 우선상환 검토 |
| 2 유동성 하한        | 세수·만기·비상지출 스트레스에 대비        |
| 3 채무위험 완화       | 고금리·단기·만기집중 위험을 우선 조정      |
| 4 준비된 성장투자      | 추가성·성과·집행준비도 검증 뒤 단계약정     |
| 5 잔여 자원         | 추가 채무관리·장기저축               |

## 기금 설립 전에 합의할 여섯 가지 운영규칙

| 합의 사항 | 최소한의 합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재원 판정 | 동일 범위 · 사전 추세 · 일시성 · 결산정산 · 가용잉여 상한    |
| 지방·교육 | 최소서비스 · 대칭정산 · 지역별 순효과                  |
| 유동성   | 스트레스 하한 · 인출상한 · 재적립                    |
| 투자    | 시장실패 · 경쟁 · 추가성 · 단계적 평가 · 퇴출 · 투자수익 회수 |
| 채무    | 이자 · 만기 · 실제 시장 발행 대체 효과                |
| 거버넌스  | 국회 통합심의 · 독립검증 · 감사 · 공개                |

기금법 · 기금운용계획 · 통합 재정공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

## 결론

# 일시적 세입 호황을 미래세대 자산 형성과 잠재성장을 제고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

## 기대

충격 완충 · 성장투자 연속성 · 채무 회복력

---

## 전제

결산·추세 검증 · 실제 가용잉여 · 정책 목적별 자산 관리

---

## 합의

입금·인출·평가·통제 규칙을 법률과 기금운용계획에 명시

---

※ 본 발표자료의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견해이며, 소속 기관 및 토론회 주최 기관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.

# 가1. 긍정적 세수충격의 현행 처리경로

| 시점·통로  | 현행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석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9월 재추계 | 국가재정법 제55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입 전망·차이 원인을 국회 보고     |
| 당해연도   | 제90조① : 예상 초과조세수입으로 기 발행 세입보전<br>국채 상환 가능<br>제89조 : 법정요건 충족 시 추경 편성 | 기발행 세입보전 국채 상환 가능      |
| 법정 이전  | 교부세·교육교부금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경 때 조정, 예결산 차이는 법정 정산 |
| 결산 이후  | 세계잉여금 법정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적자금·채무 등 우선; 잔액 사용    |
| 남는 과제  | 통합 사전 배분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시·구조 판정과 목적별 배분       |

## 가2. 교부금: 현행 제도와 정부 개편안

| 구분  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정부 제출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방교부세  | 법정 내국세×19.24%<br>+ 종합부동산세 전액 등 | 기금 전입금을 법정 내국세에서 제외<br>정산 시 내국세 추세 반영·지방재정 악화 시 별도 교부 근거 |
| 교육교부금  | 법정 내국세×20.79%<br>+ 교육세 일부      | 전년도 교부액에 명목GDP·학령인구<br>3년 변화율 반영, 전년도 교부액 미달 시 국가가 차액 보전 |
| 정산     | 추경 동시 증감·예결산 차 정산              | 개정안도 별도 법률·심의결과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책적 보완 | 자율·형평·예측가능성 보호                 | 최소서비스·전환기간·대청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국세수입 전체에 19.24%·20.79%를 곱한 값은 법정 교부액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

### 가3. 교부금 반사실과 순효과의 차이

| 항목       | 정부안  | 현행 대비 감액 추정 | 현제도 유지 가정 금액(단순합산)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지방교부세    | 77.2 | 30.5        | 107.7              |
| 교육교부금    | 78.9 | 32.5        | 111.4              |
| 합계 감액 추정 | —    | 63.0        | 지방·교육 순감과 다름       |

반사실(Counterfactual) : 정책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적 수치

기금·기타이전·최종수혜를 모두 포함한 지역별 통합 영향표가 필요

## 가4. 기금·공자기금의 연결회계 점검

| 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앙정부 통합    | 채무·순자산 판단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회계 → 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부거래 제거    | 단순 전입으로 D1(국가채무)은 변하지 않음 |
| 기금 → 공자기금 예탁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부거래 제거    | 기금자산·공자부채 상계 점검          |
| 기금 → 지방·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앙 총지출 표시  | 일반정부 연결 시 내부이전 제거        |
| 국채발행 12.5 축소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금조달 감소 계획 | 실제 시장발행 대체·이자효과 확인       |
| 기금 적립액을 국가 순자산 증가나 채무상환액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.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나1. 아일랜드 FIF·ICNF 법정 규칙

| 항목    | FIF                         | ICN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기 납입 | 2024~2035 납입연도 전전년 GDP 0.8% | 2024 최초 €2bn + 2025~2030 연 €2bn  |
| 납입 예외 | 악화 시 GDP 0.4% 또는 0          | 중대한 악화 시 정지                      |
| 기본 인출 | 2041년 이후 제안연도 전년말 NAV×3% 이내 | 충격 시 제안연도 전년말 NAV×25% 이내         |
| 특례·환경 | 조건 충족 시 최대 5%; 결의           | 연 최대 22.5%; 2026~2030 누계 €3.15bn |
| 통제    | 정부 승인·하원 결의·NTMA            | IFAC 권고·장관평가·2031 사후검토           |

NAV: 순자산가치(Net Asset Value), NTMA: 국가재무관리청(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),  
IFAC: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(IRISH Fiscal Advisory Council)

## 나2. 아일랜드: 감사실적과 전망 구분

| 기준            | FI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CNF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2025말 감사 NAV  | €12.746b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€4.074bn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.12.31  |
| 2025 수익률      | 2.2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2%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임시 저위험전략    |
| 설정 후 연수익률     | 2.4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4%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운용기간·전략 유의  |
| 2026말 NTMA 전망 | 약 €17b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 €6bn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적 아닌 전망    |
| 장기 전략         | 공모주식70%·공모채권10%·<br>실물자산10%·사모주식5%·<br>사모대출5% | 저위험 공모채권·현금90%·<br>고위험 공모채권 10% | 2026년 단계 전환 |

NAV: 순자산가치(Net Asset Value), NTMA: 국가재무관리청(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)

### 나3. 해외사례: 적용할 원칙과 한계

|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참고할 장치              | 한국 적용의 한계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아일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목적·만기·자산위험·국내투자 분리  | 다국적기업 법인세 집중구조가 다름 |
| 미국 캘리포니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동세수 적립·결산정산·인출상한   | 주정부 균형예산·정치적 중단 가능 |
| 칠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독립 추세변수·호황 적립·불황 인출 | 구리가격·잠재GDP 추정 불확실성 |
| 호주 Future Fund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목표자산수준·독립 전문운용      | 미적립 연금부채 대응이 주목적   |
| 공통 원칙: 사전규칙 · 독립검증 · 의회통제 · 자산과 부채의 통합관리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# 다1. 기대효과 · 위험 · 안전장치의 대응

| 기대효과        | 주요 위험            | 안전장치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호황기 지출압력 완화 | 기금이 새 지출 통로로 변질  | 통합 지출준칙·상시급부 예산이관 |
| 불황기 신속 대응   | 정치적 인출·계획변경 재량   | 객관적 조건·상한·재적립     |
| 성장투자 연속성    | 낮은 수익·사업 포획·매몰비용 | 독립평가·단계지급·중단권     |
| 채무 회복력      | 차입하며 저축·조달비용 증가  | 실제 가용잉여·위험조정 비용   |
| 변동성 흡수      | 지방·교육에 위험 전가     | 최소서비스·대칭정산·영향표    |

## 다2. 관련 법률안 상태와 심의 쟁점

| 의안번호    | 법률안        | 2026.9.5 확인 상태 | 핵심 쟁점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2221052 | 미래대응기금법안   | 9.3 제출·심의 중    | 계정·납입·인출·위원회 |
| 2221056 | 국가재정법 개정안  | 9.3 제출·심의 중    | 세입보전·변경 특례   |
| 2221047 |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| 9.4 회부·심의 중    | 산정모수·정산·지원   |
| 2221053 |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| 9.3 제출·심의 중    | GDP·학령인구·보전  |

설립·운용은 정부 제출안기준으로, 국회 심의 · 의결 과정이후 확정·시행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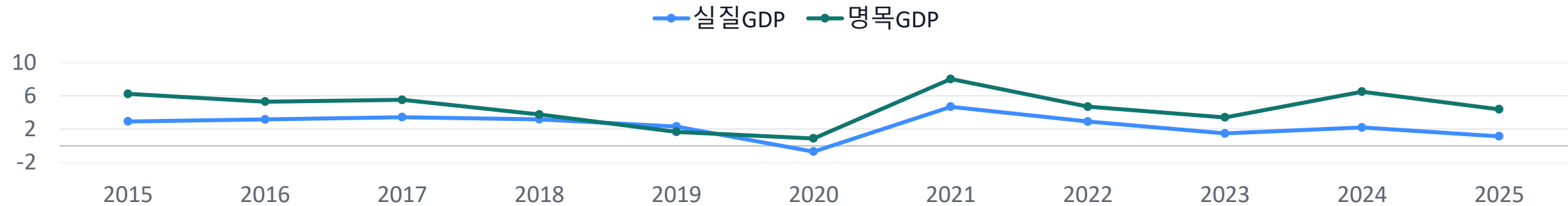
# 라1. 경제전망과 세입추계의 거시 전제

| 구분         | 실질GDP | 명목GDP | GDP디플레이터 | 통관수출(달러 기준)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2025 실적·잠정 | 1.1   | 4.4   | 3.2      | 3.8         |
| 2026 당초 전망 | 2.0   | 4.9   | 2.9      | 4.2         |
| 2026 수정 전망 | 3.0   | 12.3  | 9.0*     | 40.0        |
| 2027 전망    | 2.2   | 4.6   | 2.4      | 1.0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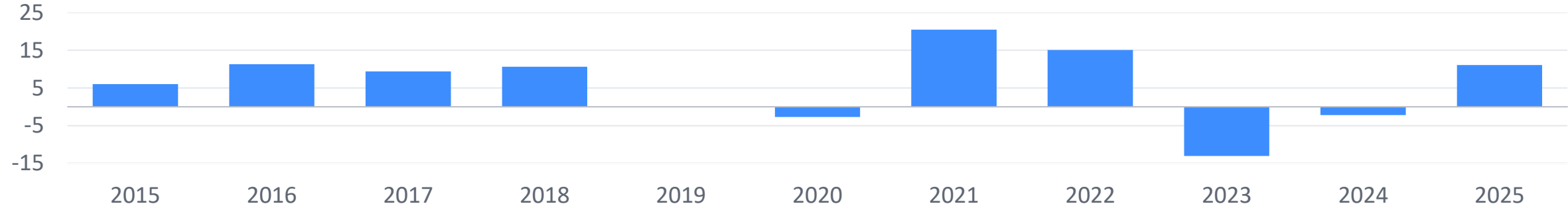
\* 2026 디플레이터는 경제전망 9.0%·세입추계 9.3% : 경제전망(7월), 예산안 제출시점(9월) 차이로 자료 시점·전제 차이

## 라2. 실질·명목성장과 국세증가의 관계

실질GDP·명목GDP · 전년대비 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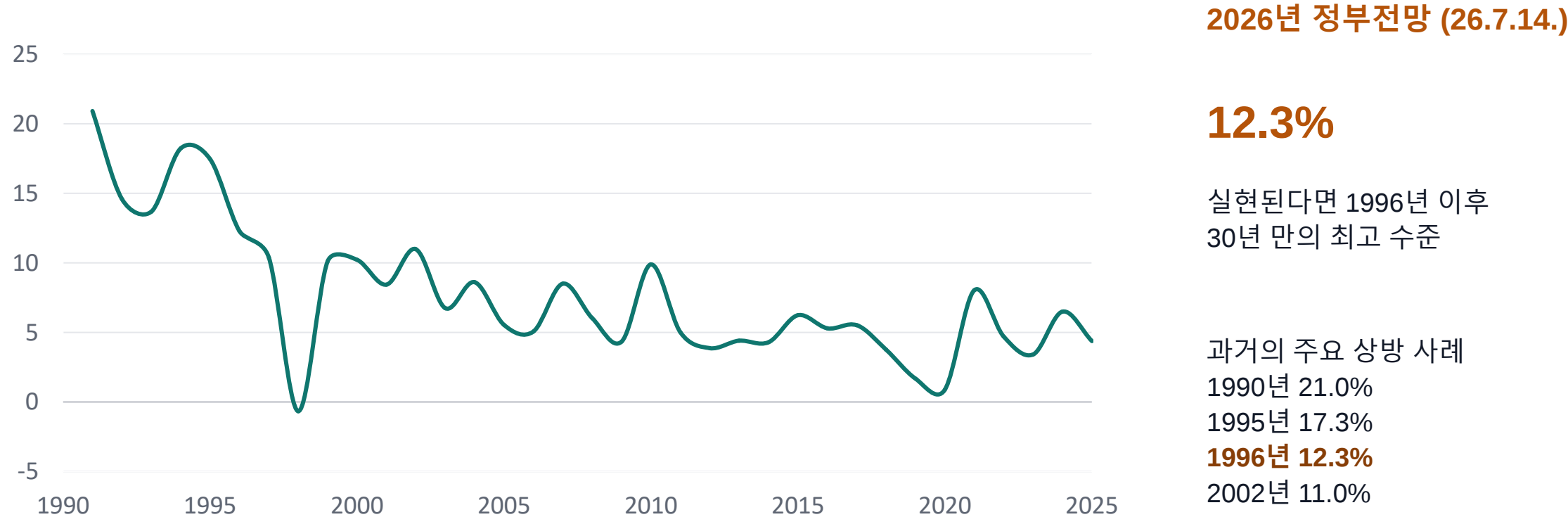
국세수입 · 전년대비 %



세수는 경기·기업이익·신고시차·세법·환급에 함께 반응하기에 1대1 대응 관계는 아님에 유의할 필요

## 라2-1. 장기 명목성장률: 위기 하방과 최근 전망

명목GDP 증가율 실적



최근 추세를 감안하여 이번 전망의 크기와 지속성을 함께 평가할 필요

### 라3. 연도별 실적: 2015~2020년

| 연도   | 실질GDP | 명목GDP | 국세수입  | 국세증가율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2015 | 2.9   | 6.2   | 217.9 | 6.0   |
| 2016 | 3.2   | 5.3   | 242.6 | 11.3  |
| 2017 | 3.4   | 5.5   | 265.4 | 9.4   |
| 2018 | 3.2   | 3.8   | 293.6 | 10.6  |
| 2019 | 2.3   | 1.7   | 293.5 | 0.0   |
| 2020 | -0.7  | 0.9   | 285.5 | -2.7  |

## 라4. 연도별 실적과 전망·예산: 2021~2027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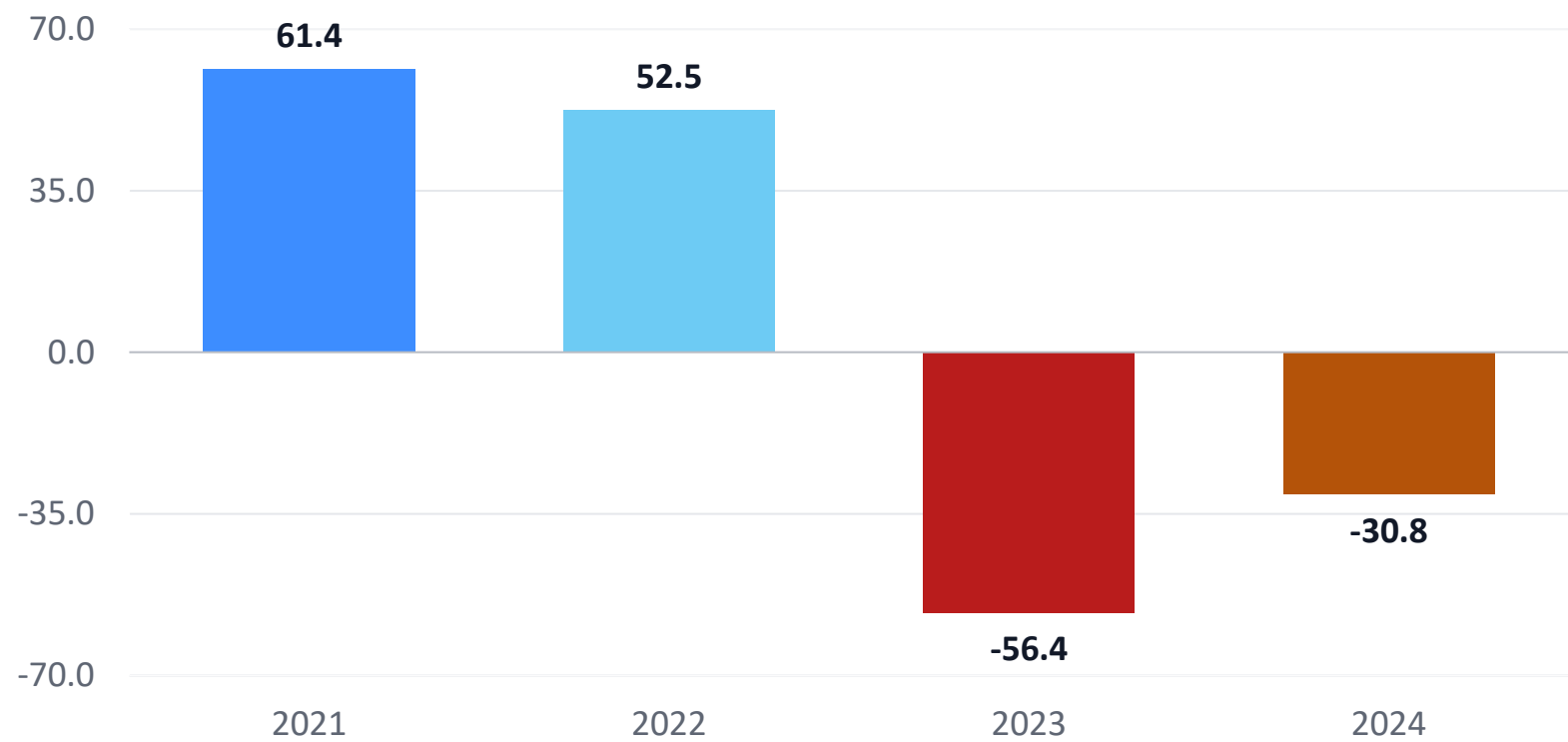
| 연도·상태           | 실질GDP | 명목GDP | 국세수입  | 국세증가율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2021 실적         | 4.7   | 8.0   | 344.1 | 20.5  |
| 2022 실적         | 2.9   | 4.7   | 395.9 | 15.1  |
| 2023 실적         | 1.5   | 3.4   | 344.1 | -13.1 |
| 2024 실적         | 2.2   | 6.5   | 336.5 | -2.2  |
| 2025 실적·잠정      | 1.1   | 4.4   | 373.9 | 11.1  |
| 2026 전망·국세 추경예산 | 3.0   | 12.3  | 415.4 | 11.1  |
| 2027 전망·국세 예산안  | 2.2   | 4.6   | 584.4 | 40.7  |

## 라5. 2027년 세입추계: 근거와 불확실성

| 항목    | 합리성 근거                   | 검증·공시 과제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인세   | 2026 기업이익이 2027 신고납부로 반영 | 반도체 이익·결손금·환급·중간예납 민감도     |
| 근로·배당 | 성과급·배당과 과거실적 반영          | 법인세와 공통요인에 함께 노출           |
| 비교기준  | 추경대비 세목별 증가액 제시          | 2026 예상실적→2027 예산 동일기준 연결표 |
| 모형·절차 | 세목별 모형·전문가단·9월 재추계       | 표본외 오차·변수기여·변경이력 공개        |
| 운용    | 점추계를 예산편성 출발점으로 사용       | 상하방 시나리오·현금경로·결산정산         |

## 라6. 세수추계차의 방향은 크게 전환 가능

R - B: 결산 - 당초 세입예산



### 해석

기술적 불확실성과  
편성 이후 경제·제도 변화가  
함께 반영된 사후 오차

### 정책 제안

추계차는 원인분해·평가에 사용  
출연은 R-T의 일시분과  
실제 가용잉여로 제한

B=당초예산 D=9월 재추계 R=결산 T=추세 (정의는 슬라이드 6 참고)

출처: NABO; 2023·2024 국세결산 | 당초 본예산 대비, 명목 조원

# 마1. 예산·특별회계·기금의 법적 차이

| 구분   | 일반회계       | 특별회계          | 기금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목적   | 일반 국가사업    | 특정 사업·세입세출 분리 | 특정 자금의 신축 운용   |
| 설치   | 국가재정법      | 개별 법률         | 개별 법률·신설심사     |
| 국회통제 | 매년 예산 심의   | 매년 예산 심의      | 매년 운용계획 심의     |
| 다년도성 | 계속비·명시이월 등 | 예산 원칙·법률상 특례  | 적립자산; 지출이월도 제한 |
| 변경   | 이용·전용 법정통제 | 목적별 예산통제      | 주요항목 변경 법정통제   |

## 마2. 추가세수의 사용수단 선택표

| 정책 필요      | 우선 검토 수단      | 기금 채택 조건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상시 서비스·인건비 | 일반·특별회계       | 지속재원 확보가 우선       |
| 다년도 자본·R&D | 예산 계속비·중기한도   | 중단비용 절감·단계약정의 우월성 |
| 세수충격 완충    | 규칙 기반 적립기금    | 결산정산·인출조건·복귀      |
| 융자·출자·보증   | 기존 전문기금 우선    | 추가성·회수·손실·우발채무 관리 |
| 채무·만기위험    | 국채발행 축소·공자 연계 | 실제 발행대체·순자산 효과 확인 |

### 마3. 정부 설계·운용안의 평가

| 항목        | 강점              | 위험·보완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재원        | 호황기 세수의 지출압력 완화 | 예상 초과세수 자동귀속 배제·결산정산        |
| 총괄+4대 계정  | 목적을 식별하는 구조     | 이전·자본·금융·안정화 용도별 별도 관리회계 구분 |
| 여유재원      | 세수·시장충격 완충 가능   | 현금 스트레스·조달비용·인출자격           |
| 발행축소 12.5 | 이자·재조달 위험 완화    | 채무상환과 구분·실제 발행대체 확인         |
| 변경·외부운용   | 신속성·전문성         | 국회 이중한도·이해충돌·독립수탁·감사        |

# 바1. 산업정책 문헌: 정책 제언과 해석의 한계

| 문헌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책적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석의 한계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IMF WEO 2025.10 ch.3                    | 표적부문 개선은 가능; 효과 작음<br>오표적은 총생산성 저해 가능 | 연관·모형 결과를 인과로 단정 금지 |
| IMF Fiscal Monitor 2024                 | 기초연구·젊은기업 R&D·확산 결합                   | 국가별 집행역량·정책조합 차이    |
| IMF Working Paper 24/176                | 외부성·국내파급·집행역량이 조건                     | 저자 견해·모형 분석         |
| OECD, Industrial Policy Handbook (2026) | 추가성·경쟁·비용·집행·평가 점검                    | 선별보조의 실증근거 제한       |
| Juhász·Lane·Rodrik 2024                 | 최근 인과문헌은 조건부로 긍정적                     | 정책·시기·지역 맥락에 의존     |

## 바2. 4대 계정 대표사업: 범위와 공시 누락 위험 점검

| 계정·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식자료의 대표사업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 과제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청년 13.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첫취업·창업·공공임대·미래적금<br>혼인·출산·문화패스         | 이전·역량투자·주거자산 구분   |
| 성장동력 14.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프론티어AI·제조AI·AIDC·자율주행<br>PF펀드·한전출자     | 성장투자와 안정화·구제금융 구분 |
| 지방 10.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래성장지원·복합센터·행정통합<br>농업AX·유통·지방호텔       | 정부·지역 수요와 운영비 확인  |
| 교육·인재 7.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대 과기원·이공계장학·창업대학<br>AI대학·인재성장·교사비율·인턴 | 상시비·장학·연구·고용지원 구분 |
| 사업별 총사업비·기금부담·다른 회계부담·다년도 운영비의 연결표가 필요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### 바3. 사업평가의 성장경로·실무 제약·성과 지표

| 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무 제약               | 우선 검토 성과지표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청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민간대체·반복급부·단기재원      | 12·24개월 고용·임금·이동·창업생존 |
| 성장동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진부화·종속·포획·민간투자 대체 | 민간유발·확산·집중도·회수·중단     |
| 지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요감소·운영비·지역 간 대체    | 이용률·접근시간·생애비용·국가 추가성  |
| 교육·인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령감소·교부금중복·성과시차     | 학습·수료·취업·임금·연구이전      |
| 공통 규율: 공개선정 · 공동부담 · 단계지급 · 외부평가 · 환수·일몰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# 사1. 예산 기준과 추세 기준의 2×2 구분

| 결산 기준               | $R \leq B$ : 예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$R > B$ : 예산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$R > T$<br>추세 상회    | 추계차는 0 또는 음(-), 추세상회는 양(+)<br>예산보다 적어도 출연후보 가능 | 두 지표 모두 양(+)<br>일시적 $R-T$ 만 검증 후 출연후보     |
| $R \leq T$<br>추세 이내 | 추계차 0 또는 음(-), 추세상회 없음<br>완충 인출·지출조정 검토        | 예산 초과지만 추세상회 없음<br>예산 초과만으로 출연은 바람직하지 않음. |

B=당초예산 D=9월 재추계 R=결산 T=추세 (정의는 슬라이드 6 참고)

예산 대비 초과 여부와 결산추세 상회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

같은 세목·회계범위의 R·B·T를 비교

## 사2. 계획→재추계→결산→대청정산

| 시점      | 정부안·현행 절차           | 정책 제안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계획      | B-T를 추가세수로 운용계획 편성  | T 산식·범위 사전공표; 잠정한도 |
| 9월 재추계  | D-B 내국세 증가분 추가적립 구상 | 자동귀속 배제; 원인분해·범위공개 |
| 결산·법정정산 | R 확정·교부 정산·세계잉여금 처리 | 정책·일회성 조정 R-T 독립검증 |
| 확정·배분   | 세부 확정식·대청규칙 명확화 필요  | 추가출연·환입; 차입금지·배분순서 |

B=당초예산 D=9월 재추계 R=결산 T=추세 (정의는 슬라이드 6 참고)

$$\text{확정 출연} \leq \max[0, \min\{\text{검증된 일시적 R-T, 실제 가용잉여}\}]$$

# 아1. 출처·자료기준·해석 원칙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과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표기 원칙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내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정부안·세입추계·경제전망<br>국가재정법·관련 법률안·ECOS·국세결산         | 실적·잠정·전망·예산안 구분           |
| 국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reland Act · NTMA · IFAC<br>IMF · OECD · World Bank | 법정 규칙·감사실적·권고 구분          |
| 학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료심사 학술논문 · 국제기구 연구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관관계·인과·모형·저자견해 구분        |
| 수치·용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명목 조원 / 전년대비 % / 자료기준 2026.9.5                       | B=당초예산, D=재추계, R=결산, T=추세 |
| 실적을 설명하는 비교기간 평균과 기금 출연용 정책중립 추세 T는 다름에 유의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